

# 건설동향브리핑

## 제468호 (2014. 7. 7)

### ■ 경제 동향

- 6월 CBSI, 전월비 2.7p 하락한 74.5 기록

### ■ 정책 · 경영

-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이 건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갈라파고스형 건설산업 규제, 이제는 혁신 필요

### ■ 정보 마당

- 한 · 중 · 일 FTA, RCEP 그리고 TPP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건설 경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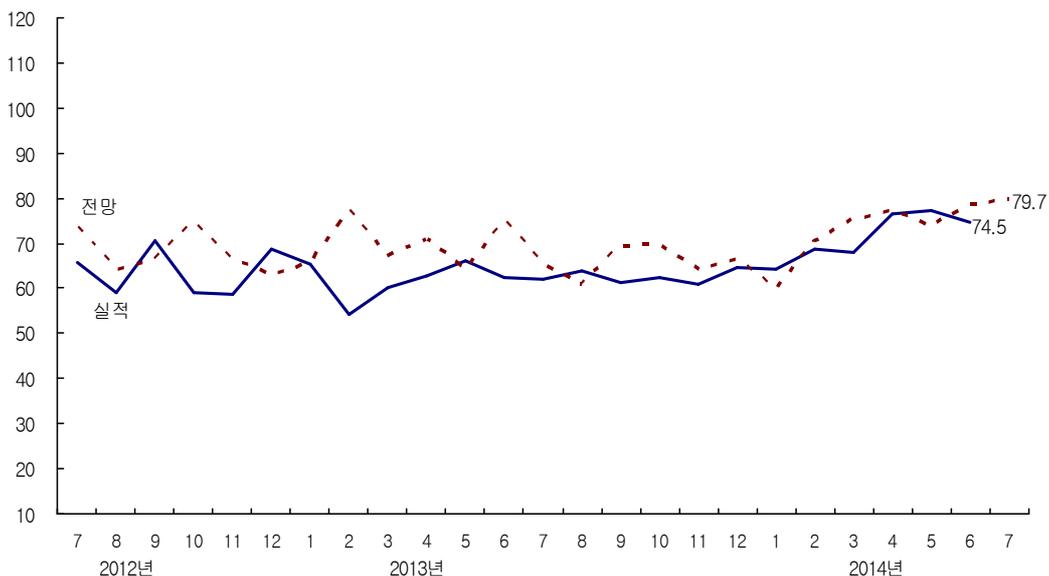
## 6월 CBSI, 전월비 2.7p 하락한 74.5 기록

- 3개월 만에 다시 소폭 하락 -

### ■ 3개월 만에 소폭 하락...4, 5월 제외하면 여전히 2010년 2월 이후 최고치

- 2014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sup>1)</sup>는 전월비 2.7p 하락한 74.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9.3p 상승), 5월 지수로는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77.2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6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함.
  -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 효과와 그동안 양호했던 소규모 공사 발주가 주춤하면서 중소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월비 2.7p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지난 4월의 76.5, 5월의 77.2를 제외하면 여전히 2010년 2월의 77.6 이후 최고치임.
  - 즉, 6월 CBSI가 기준선(100.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0선 중반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하지만, 지난 4년 동안의 건설 경기 침체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수준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업체 및 중견업체 지수 소폭 하락, 중소기업 지수 큰 폭 하락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0.6p 하락한 92.3를 기록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반전함. 하지만,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통계적 조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0.8p 하락한 73.3로 4월에 15.2p 상승하여 75.9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냄. 최근 시장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체감 경기 완화 속도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7.4p 하락한 55.1를 기록해 1개월 만에 60선 아래로 떨어짐. 최근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통계적 조정 효과와 소규모 공사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4.0	61.2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8.8	79.7	
규모 별	대형	92.9	85.7	84.6	85.7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100.0
	중견	48.1	50.0	51.9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3.1	73.3
	중소	48.1	45.3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5	55.1	60.4	63.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7월 전망치, 6월 실적치 대비 5.2p 상승한 79.7 기록

- 2014년 7월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5.2p 상승한 79.7을 기록함.
  - 익월 전망치가 79.7을 기록한 것은 2012년 3월 조사시 4월 전망치가 81.7을 기록한 이후, 익월 전망치 중에서는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임.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그만큼 7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6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다만, 7월에는 혹서기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7월 실적치는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이 건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 일반건설업체의 ‘기능 마스터 고용 사례’ 중심, 긍정적 효과 큰 것으로 밝혀져 -

### ■ 건설 기능인력 ‘현장 경험’의 중요성 : 건설 생산에서 ‘지식 창조’의 원천 중 하나

-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로서 ‘경험’의 중요성 : ‘지식 창조’의 원천
  - 암묵지란 오랜 경험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득한 지식이나 노하우로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말함. 그에 비해 형식지(形式知, Explicit Knowledge)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문서화, 또는 데이터화된 지식을 말함.
- 건설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의 중요성 : 건설 생산에서 ‘지식 창조’의 원천 중 하나
  - 건설 생산에서는 생산물의 특성인 각이성(各異性)과 생산 과정의 특성인 옥외성(屋外性)으로 인해 암묵지인 건설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은 더욱 중요함.
  - 각이성은 생산물이 모두 다르다는 뜻으로, 동일한 기능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 시공 작업이 실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의 옥외성은 동일한 기능이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자연에 노출된 자재의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이것은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음.
  - 또한, 건설 현장에는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다수 생산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함. 이것 역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두루 수행하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음.

### ■ 모 일반건설업체 ‘기능 마스터’의 개념과 도입 배경 및 현황

- 기능 마스터란 건설 현장에서 협력 업체의 시공 지원, 설계 및 시공 방법 검토, 현장 훈련, 작업 관리 등 실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건설업체 소속의 중간 기술직을 지칭함. 기능 마스터의 평균 연령은 52.0세이고, 현장 총경력은 26.7년으로 조사됨.
  - 대부분 기능인력 출신의 고숙련 인력이고, 팀·반장, 또는 협력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지녀 다양한 생산 주체의 역할을 두루 수행한 ‘현장 경험’ 보유자들임.
  - ‘이론+실기+관리+경력’ 등이 결합된 주체라는 점이 기능 마스터를 다른 주체와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이들이 발휘하는 복합적 능력의 원천임.

- 2006년에 2명으로 시작한 이래 초기에는 중대 하자 발생 공중, 또는 하자 다발 공중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는 반복 하자 및 시공 오류의 저감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9년에는 품질 고급화 및 아파트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력 20~30년의 팀장급 40명을 상용화하였음.
  - 2014년 5월 현재 고용된 기능 마스터는 총 218명이며, 공중별로는 건설 87명(39.9%), 기계 56명(25.7%), 전기 39명(17.9%), 토목 22명(10.1%) 등의 순임. 여기서는 주로 ‘건설 공중’의 기능 마스터 사례를 소개함.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상용화되었으며, 연봉은 개인별 평가를 통해 6,000만~8,000만원을 지급함. 직급은 과장급으로 대우함.
- 기능 마스터가 되면서 달라진 상황으로 정기적인 휴일 확보, 가족의 만족도 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여건의 조성, 성취도 및 자부심 제고, 업무 시간의 계획적 활용 가능, 창의적 기법의 적용, 정시 출·퇴근, 고용 안정 및 계획적 생활 가능 등을 꼽음.
  - ‘생각만 하던 창의적 기법을 실제 시공에 관철’이라는 것은 ‘원수급자 기술직으로서의 지위 부여’로부터 비롯된 변화인데, 과거 협력 업체 기술직의 주장은 시공 과정에 실제로 반영시키기 어려웠으나 기능 마스터의 지위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 ‘기능 마스터’를 통한 현장 경험 활용 : 창조 경제의 맹아적 형태, 건설 생산에 긍정적 영향

- 이것은 건설 현장에서 각 생산 주체들의 다양한 역할을 두루 수행하면서 체득한 기능 인력의 ‘현장 경험’을 건설 생산 과정에 오롯이 되돌림(Feedback)으로써 반복되는 시행착오는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은 제고하려는 시도임.
  - 기능 마스터의 현장 경험을 유형화하여 실제로 실용신안(장비 공중의 건설 리프트의 발판 구조)이나, 특허(콘크리트 공중의 방수턱 거푸집 설치 구조, 형틀 공중의 수직방수 긴결재, 보 긴결재 옹벽 보강대, 중단열 거푸집 긴결재) 등을 등록하기도 하였음.
  - 분석 결과, 기능 마스터는 생산 참여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시공 기술인력과 기능인력 간 가교, 시공 중 적정 시공 여부 체크, 기능인력 작업 지도 등), 작업 방법의 표준화 및 개선을 통한 재시공 및 하자 발생 저감, ‘손끝 기술’을 활용한 창조적 공법의 개발 및 전수를 통한 시행착오 극복 등의 경로를 거쳐 건설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

## 갈라파고스형 건설산업 규제, 이제는 혁신 필요

- 개별 정부 부처에 일임해서는 개선 어려워, 범정부적인 협조와 결단 필요 -

### ■ 공사용 자재 발주자 구매, 전기공사 분리 등 공사 수행 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만연

- 최근 모든 업종에 걸쳐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건설산업은 각종 규제로 점철된 상태로 복지부동의 상태임.
  - 워낙 규제가 견고한데다 업역 간 이해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위 ‘갈라파고스’형 규제<sup>1)</sup>의 폐해가 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발주자에게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를 의무화한 중소기업청의 규제를 보면, 대부분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형적인 규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공공 발주기관은 20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시 소요되는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20개 품목은 중소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해야 함.
  - 이는 중소기업체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공자로서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자재나 설비를 제공받아 시공한 후, 안전 및 품질,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현장 인근의 자재업체를 제외하고 원거리에서 납품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함.
  -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Turn-key) 공사나 민자 사업까지도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설 자재나 설비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토록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 중소기업 제품만 쓰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 공사 발주 방식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도 폐해가 큰데, 예를 들어 전기나 정보통신공사는 무조건 분리하여 별도 입찰해야 하며, 환경부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도 무조건 분리 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모든 발주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공사나 용역의 분리 발주를 강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국내는 감리마저도 전기, 정보통신 등으로 분리 발주
  - 건축사 업역의 칸막이식 규제도 건축 설계와 시공을 강제 분리시켜 시공 과정에서 나

1)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있는 규제를 지칭

타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의 정보가 설계에 피드백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

- 최근 정부에서 활성화를 표명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건설기업은 처음 보는 하도급자와 동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많으며, 당연히 낙찰 후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사의 품질이 양호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글로벌 추세에 어긋남.
  - 입찰자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발주자의 재량권을 제약하거나, 입찰자 평가시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우선하는 점도 전근대적임.
  - 물량 내역에 대한 오류를 입찰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실적공사비적산제도도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세부 공종별 설계 단가를 획일적으로 공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공공공사 하자 책임 기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요 구조부는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 부실이나 자연적인 마모까지 하자로 치부되는 문제점이 존재
  - 외국은 하자 책임 기간을 대부분 1~2년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공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중대 하자에 국한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임.

##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만 저해

- 건설산업에서 갈라파고스형 규제가 많은 이유는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각 부처별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는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
- 건설산업에 존재하는 갈라파고스형 규제들은 개별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일임해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각 부처의 이해 관계를 떠나 가장 효율적인 공사 수행 체계를 고민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범정부적인 협조와 결단을 통하여 건설산업을 옥죄는 갈라파고스형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 한·중·일 FTA, RCEP 그리고 TPP

-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 3국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

### ■ 동아시아 경제 통합 추진 현황

-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을 중심으로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의 통상 장관들은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했음.
  - 같은 날, 상기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RCEP의 협상을 개시함.
  - RCEP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ASEAN과 기존에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협정임.
-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와는 별도로 양국 간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1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 RCEP, 그리고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이 협상에 참가하게 된 것에는 한·중 FTA 협상의 진행이 크게 작용했음.
- 한·중·일 3국은 한·중·일 FTA와 동시에 RCEP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임.
  - RCEP가 ASEAN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권의 설립을 위한 지역 경제 통합 노력인데, RCEP에 선행하는 한·중·일 FTA의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비중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 없이는 RCEP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은 서로의 타결에 도움이 됨.
- 한편, 일본은 2013년 3월에 개최된 한·중·일 FTA 1차 협상에 앞서 2013년 3월 15일

에 TPP 협상 참가를 공식화했음.

-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궁극적으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간의 FTA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 협정임.
-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노동, 환경, 정부 조달, 투자,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기술적 무역 장벽, 위생 및 식물 검역,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7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음.
- 2013년 5월에 17차 회의까지 진행된 TPP 협상은 같은 시기에 1차 회의가 진행된 RCEP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TPP 협상은 미국의 실질적인 주도 아래에서 참가국들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정부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음.
  - 반면, RCEP 협상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경제 협력 등 일부 주제에 한정되고 법·제도, 통신, 노동, 환경, 원산지 규정 등의 이슈는 배제하여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
  - 뿐만 아니라, RCEP는 ASEAN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TPP 참여로 이어질 경우, ASEAN 주도의 RCEP 협상은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큼.

## ■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 우리 정부는 한·중·일 FTA 협상을 한·중 FTA와 한·일 FTA, 그리고 RCEP와 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점을 이미 진행된 한·중·일 FT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 현재까지 11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한·중 FTA의 조기 타결은 한·중·일 FTA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한·중·일 FTA는 RCEP 협상에서 한·중·일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협상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2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li> <li>- 국내 주택시장 주요 이슈 및 하반기 전망 관련 토론</li> </ul>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상반기 수익 달성 실적 및 하반기 수익 목표 심의</li> </ul>
7. 1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 city 고도화 연구단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li> <li>- 해외 진출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토론 등</li> </ul>
7. 2	주택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청약가점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li> </ul>
7. 3	한국건설경영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하반기 건설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발표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li> <li>- 주제 : 2014년 하반기 건설 경영 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 및 대응</li> </ul>
7. 4	한국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별 직업별 인력 수급 전망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li> <li>- 건설산업 취업자 수급 전망시 주의할 사항 논의</li> </ul>
	한국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사업실 주최,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li> <li>-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li> </ul>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정 성립시의 효력 미약과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li>•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대폭 개선·정비한 바 있음.</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 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li> </ul> </li> </ul>

■ '2014년 CERIK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이에 연구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 중임.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 건설 경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건설시장에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추이부터 살펴보면 2007년의 1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91조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던 수주액이 지난해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그 추세가 올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 불황 벗어날까, 더 빠지나 기로에

그러나, 1/4분기 증가세는 공공수주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예산의 조기 집행, 지방 선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기저효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민간의 비중이 공공에 비해 배 이상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공공 지출에 의존하는 성장은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1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반전해 전년비 6.7% 증가했다. 이는 투자가 수주에 약 1년 반 정도 후행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 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에 증가한 건설수주의 기성 진척 등 정책 효과에 기인한다. 1/4분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4.1%로 둔화됐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주 실적을 고려하면 건설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전년비 1%대 중반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설수주는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보다는 증가하나 100조원에 못 미치며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수주는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서 35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수주액은 최대 65조원 정도로 침체 직전인 2007년의 91조원에 비해 크게 저조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경기 정상화 여부는 민간수주의 회복, 특히 민간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민간주택 수주의 회복에 달려 있다.

### 주택 규제 완화로 경기 불씨 살려야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회생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퇴냐, 또는 전진이나 기로에 놓인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부가 돈으로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예산 집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월에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부터 보완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원칙으로 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은 환영할 만하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철폐, 금융 규제 완화, 주택공급규칙 개편 등이 시행된다면 주택시장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대처가 시급하다. <서울경제, 2014. 6. 13>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